이용섭 시장 "중앙공원 심의 보류 매우 유감"

실시계획 인가 후 1년 2개월 지나…고소·고발 50여건
시청 간부들 업무 파악 못하고 소극적 행정 강한 질타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도시계획 심의가 다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지난해 6월 1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지난 6일 심의에서 다시 보류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이나 정책은 시기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이라도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특히 "중요한 정책에 대해선 업무시간을 넘기더라도 치열하게 해결하려는 의욕을 보여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그렇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시기를 다투는 현안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다시 열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데, 관련 규정에도 없는 한 달에 한번꼴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느슨한 행정 행태를 질타했다.

이 시장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해 고소, 고발만 50건이 넘는다. 공직자들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심하게 상충한다면 현 제도나 여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도시계획 위원들을 설득조차 하지 못했다"며 "특히 관련 시청 간부들은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일(10일) 간부회의에서 해당 간부들의 책임을 묻고,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를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직원들에게 온화한 업무스타일을 보여온 이 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도시계획 심의 보류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직자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은, 전국 모범사례임에도 '특혜성 사업' 등의 오명까지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와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측은 1년 넘게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와 분양방식 등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무등산 조망권과 공공성 훼손, 업체 특혜 등을 주장하며 심의통과를 사실상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90%가 넘는 공원부지를 확보했고 비공원 시설(아파트 등)은 9.1%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전국 평균은 20%가 넘는다"며 "우리(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정 이익을 초과하면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고 환수토록 하는 협약까지 맺었는데도,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7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고, 위원 표결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최종 결정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함평권역 이전 급물살

이 시장 "광주 관내 이전 바라지만 꼭 가야 한다면 존중"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빛그린 산단 내 함평권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금호타이어 이전은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모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광주시는 여전히 광주 관내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회사측이 빛그린 산단 함평 지구로 꼭 가야 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금호타이어는 3~5년 내 공장 신축, 평당 80만원 안팎의 땅값을 선호하고, 공장 노후화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광주에 잡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특히 새로 산단을 개발하려면 절차적으로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기존 산단에서는 땅값을 맞출 수도 없다. 금호타이어는 향토기업이고 빛그린 산단은 광주·전남 공동 산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측은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에 걸쳐있는 빛그린 산단의 함평 권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오히려 금호타이어 이전 후 개발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전 후 현 부지의 개발 방향이 중요한데 아파트 위주는 절대 안 된다"면서 "공장 주변 KTX 투자 선도지구 종합개발 사업과 병행해 송정역 일대를 교통·물류 허브,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60년 삼양타이어라는 이름으로 광주 서구 양동에서 출발한 금호타이어는 1974년 광산구 소촌동 현 광주 공장으로 확장 이전해 운영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AI연계 미래차 실증기반 조성 본격화

첨단3지구에 'AI형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구축

광주시가 첨단 3지구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형 자율주행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구축한다.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다양한 실제 주행상황을 가상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능의 개발·검증을 돕는 첨단장비다.

특히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필수시설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뮬레이터는 승용, 상용, 특수목적 3대 이상의 교환형 캐빈을 통해 다양한 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검증을 수행한다. 또 이미 구축된 고사양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하나의 가상도로환경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Lv.4 시나리오도 검증할 수 있다.

자율주행 플랫폼 연구개발 활성화와 실차 기반의 테스트 안전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과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시뮬레이터 구축을 발판으로 광주가 자율차 등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담양·보성·영암·함평 선정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사업을 선정해 육성·지원하는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결과 담양, 보성, 영암, 함평의 총 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중앙 공모에만 의존해왔던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에서 벗어나 시군 주도적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성이 큰 사업들을 선정,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군이 주체가 돼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의 서면·발표 심사와 함께 인구, 재정 등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평가지표'를 적용해 4개 사업을 확정했다. 도비 200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436억원을 투입한다. 담양군은 '프리미엄 담양딸기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 보성군은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영암군은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 파크' 등의 시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공공 배달앱 출시 한 달 이용액 6억 넘어

소상공인 부담경감 등 장점 많아

광주 위메프오 공공 배달 앱이 정식 출시 한 달간 이용액 6억원을 넘어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정식 출시된 공공 배달 앱은 한 달 동안 2만5900여건, 6억4000만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 누적 거래액(3억7400만원)보다 71.1%나 증가한 것이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4월 이후 4개월간 이용 실적은 6만3800여건, 14억9900만원이다.

가맹점도 4월 1일 현재 2717개, 7월 1일 4632개, 7월 30일 5209개 등으로 늘어났다. 민간 배달 앱과 비교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장점이 많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메프오 광주 공공 배달 앱은 6.8~12.5%인 민간 배달 앱 중개수수료를 2%까지 낮추고, 지역 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가맹점 추가 입점, 소비 촉진 마케팅, 앱 이용 편의성 제고 등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 전력기자재 중심지 육성 전남도, 클러스터 구축 보고회

전남도가 전력반도체와 수치제어(CNC) 컨트롤러, 가스켓 등 전력기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에너지밸리 유치를 확대해 나주를 전력기자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나주시, 한국전력, 동신대, 목포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기자재 국산화 클러스터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3135억원 규모의 중대형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용역은 가격 경쟁력 심화와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로 발생한 전력기자재 대외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력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기획됐다.

보고회에서는 전력기기 현황 분석,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력기자재 클러스터 구축 등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한국전력,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참석자 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대외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반도체, 일본 전략 수출규제 품목인 수치제어(CNC) 컨트롤러, 극한환경에 사용되는 가스켓 등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전력기자재 부품 기업 유치 확대, 직류산업으로 사업 다각화, 한전 우선 구매 물량 확대를 통한 고용 투자 확대 유도 등의 활성화 대책이 제안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